

# 화정아이파크 주거 지원책 마련... 입주예정자들은 불만

현대산업개발, 2630억 규모 화정아이파크 주거지원 대책 발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제 때 입주하지 못한 예비입주자들을 위해 263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주거와 대출금을 지원하기 위해 2630억원을 들여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비입주자들은 "이자 받으며 돈 빌려주는 것 뿐인데 생색까지 낸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총 847세대 예비입주자들에게 전세자금 확보 등을 위한 주거지원비 1000억원을 지원하고 1630억원 규모로 중도금 대위변제를 실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관련 서류는 다음달부터 접수하며 10월부터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이번 지원책은 예비입주자들이 아파트 재시공 기간 동안 살 집을 찾을 수 있도록 대출이나마 마련해 주자는 취지다. 지원은 현대산업개발이 예비입주자와 금전 대차 계약을 맺고 직접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이뤄지

주거지원비 가구당 1억은 무이자 "전셋집 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DSR 회복 위해 중도금 대위변제 가구당 2억... 이자율은 추후 지정 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절차 마련

며 한 가구당 평균 3억 3000만원 가량의 대출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거지원비 1000억원은 예비입주자들이 입주 예정일인 2027년 12월까지 5년 1개월(61개월) 동안 전세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빌려주는 지원이다. 무이자로 빌릴 수 있으며 한 가구당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1000만원 안팎이다. 주거지원비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지원금만큼 입주 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금액을 분양가에서 할인할 방침이다.

현대산업개발은 또 예비입주자들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회복을 위해 중도금 대위변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며 현행법은 DSR 규제를 걸어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정해뒀다. 현재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이 1억원이 넘는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연소득의 40%(은행 기준)를 넘길 수 없다.

예비입주자들은 화정 아이파크 계약 당시 받았던 대출금 탓에 DSR 규제에 막혀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다며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 왔다.

현대산업개발은 총 1630억 원을 투입해 4회차까지 실행된 예비입주자들의 중도금 대출액을 대위변제 해 줄 방침이다. 중도금 일부를 현대산업개발이 대신 변제해주고, 구상권을 갖는 방식이다. 이 금액

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아닌 만큼 추가 대출 시 DSR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중도금 대위변제 지원금은 가구당 2억 2000만원 안팎이며 이자를 받는 계획이다. 이자율은 입주자협의 사항과 금리 상황에 맞춰 추후 지정할 방침이다.

현대산업개발은 또 오는 10월부터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공급 계약상 계약의 해제는 입주 예정일의 3개월 뒤부터 가능하며, 화정 아이파크의 경우 2023년 2월부터 가능하다.

이번 지원책과 관련해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는 "반쪽짜리 지원책이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승업 예비입주자협의회 대표는 "자기들이 채권자가 돼서 무이자로 1억원, 이자 쳐서 2억원 빌려 주겠다는 것 뿐인데 마치 많은 돈을 지원한 것처럼 생색내고 있다"며 "당초 주거지원비 1억원조차 5년 넘도록 전셋집을 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

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대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이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나 양쪽이 모두 만족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만족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1일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층짜리 건물 공사 중 201동 23~38층 일부가 붕괴하면서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고 현장은 현재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22~39층 동쪽 기둥과 남측 외벽을 철거하는 안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공사비 2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8개 동을 전부 철거한 뒤 재시공하기로 했으며, 현재는 전체 철거·재시공을 위한 공법 수립·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예비입주자들은 당초 오는 11월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붕괴사고와 여파로 입주 예정일이 오는 2027년 12월로 미루졌다.

/유연제 기자 yjyou@kwangju.co.kr

## "112로 신고하라" 출동 거부한 광주소방

초기 대응 부실로 50대 여성 골든타임 놓쳐 사망... "주취자 판단" 해명

광주소방당국이 여성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도 "112로 신고하라"고 안내해 부실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소방당국이 쓰러진 여성을 단순 주취자로 오인하고, 초기 대응을 부실하게 하면서 이 여성은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광주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0시 10분경 광주시 북구 운암동 골목길에서 50대 여성 A씨가 쓰러졌다는 B씨의 신고가 소방상황실로 접수됐다.

B씨의 신고에 소방은 "112로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A씨를 술에 취한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곧이어 소방당국은 경찰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뒤 최초 신고 후 17분이 지나서야 구조대를 출동시켰다.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 접수 당시 A씨는 병원에 입원 중인 남편에게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주는 길에 쓰러졌고, 이를 지켜본 행인 B씨가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병호 기자 justbh@kwangju.co.kr

유족들은 "소방당국의 부실대응에 A씨가 숨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실대응 논란에 대해 광주시소방본부 측은 "B씨의 신고 녹취록을 토대로 A씨를 주취자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B씨의 최초 신고가 '골목길에 A씨가 쓰러져 있다'였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을 원하는지 물어봐 달라'는 소방관의 안내에 '어려났다 다시 쓰러졌다'고 이야기해 '술 취한 사람의 신고'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소방관이 재차 '병원이송을 원하는지 물어봐 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가 '무서워서 말을 걸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해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기 전까지 손발을 다루는 환자가 아니라 단순 주취자로 판단하게 됐다는 것이 소방본부 측 설명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20조 2항)에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소방당국의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신고 시점이 해가 저문 심야도 아닌 토요일 오전이었다는 점에서도.

/정병호 기자 justbh@kwangju.co.kr

## "김순호 경찰국장 임명 철회하라"

광주 공무원노조 촉구... "노동운동 동료 밀고 의혹"

광주지역 공무원 노동조합이 '노동운동 동료 밀고' 의혹을 받고 있는 행정안전부 김순호 경찰국장 임명 철회를 정부에 요구했다.

광주시·5개 자치구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11일 '항일운동 독립운동가를 일제에 밀고한 영화 '밀정'이 떠오른다"며 "김순호 치안감의 경찰국장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순호 경찰국장은 30여 년 전 '인전 부친민주노동자회(인노회)' 활동 중단 후 잠적, 민주인사 탄압을 상징하는 치안본부 '대공 특재'로 밝혀 승승장구한 경찰"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경찰직장협의회, 총경 등 대다수 경찰과 국민의 반대, 위헌·위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신설이 지난 1일 강행된 데 이어, 경찰국장 자리에 밀고 특재 경력이자 임명됐다"며 "이는 수

많은 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성숙한 민주 시민들을 우롱하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했다.

노조는 "당시 그가 사라지자마자 같이 활동했던 인노회 활동가들이 대거 구속돼 고초를 겪었다. 많고 많은 경찰 중 민주인사 탄압을 상징하는 '치안본부' 출신을 앉히려 하는가"라며 "노동운동 활동가들을 배신하고 이념 서클의 동향을 보고하는 정보원 역할을 했다는 증언이 확인된 바 있다"며 1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강경대 열사 부친 강민조씨 등과 함께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성균관대민주운동문화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국장은 재학 중이던 1983년 학생운동을 하다 석화공작 대상자로 분류돼 군에 입대했고, 이후 성균관대 주요 이념 서클의 동향을 보고하는 정보원 역할을 했다는 증언이 확인된 바 있다"며 1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강경대 열사 부친 강민조씨 등과 함께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고 할머니들의 나이는 94세"라며 대법원을 향해 정부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나영주 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 시민단체 "미쓰비시 자산 현금화 명령 신속 선고" 대법원에 촉구

광주 시민단체가 일제 강제동원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명령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또 대법원에 지난 7월 26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관련 의견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1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대법원에 접수된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의 사건은 오는 19일 4개월이 지나 심리복속행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상고 근거가 없으면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결정일이 다가오자 미쓰비시중공업은 민관협의회가 구성돼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니 재

판을 미뤄달라'고 주장했다"며 "한국 외교부도 7월 26일 미쓰비시중공업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담아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피해자 대리인과 지원단체는 민관 협의회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다. 피해자 측 입장과도 무관하다"며 "민관협의회의 활동 여부가 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외교부 의견서에 대해서는 "강제연행을 당하고 78년을 기다려온 피해자의 손발을 묶는 또 다른 '국가폭력'이다"며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한 지 16일째인데, 직접 당사자인 피해자 할머니들도 해당 의견서를 못 읽는다는 등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이미 원고 3명은 사망하고, 생존자

인 김성주·양극명 할머니 또한 오늘 내일을 알 수 없는 처지다"며 "대법원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외교부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측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당 기업의 국내 특허권 등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매각, 특별연금과 명의를 받아냈다. 해당 기업들은 한일청구권 협정상 배상 책임이 없다며 명령에 불복하고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한 상태다.

반면 시민모임 등은 지난 2018년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 내렸으므로 해당 기업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유연제 기자 yjyou@

## 국악계 "개정 교육과정 국악 소외" 반발

국악계가 2022 개정 교육과정(시안)에서 국악이 소외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 대학 국악교수 등으로 꾸려진 전국국악교육자 협의회는 11일 자료를 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국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면 삭제됨에 따라 학교 교육에서 국악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분

제 삼는 부분은 초·중·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규정하는 교육 과정 가운데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에서 국악 관련 내용이 모두 빠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악인이 반발하자 교육부는 시안을 보완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구진과 협의진 구성에 50:50비율을 유지하기로 했었다"면서 "그러나 최

근 2022 개정 교육과정 2차 연구에서 교육부와 국악계가 협상한 내용은 연구 책임자의 파행적 운영으로 인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2일 광주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학교에 재직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구 책임자의 사퇴를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새 교육 과정은 공청회를 거쳐 올 하반기에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단위:원]	비고
2021타경 7198	1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962 185㎡	전	19,200,000 19,200,0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1타경 5754	1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967 228㎡	전	3,648,000 3,64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1타경 7075	1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962 185㎡	전	35,245,000 35,245,000	공유자우선매수권 1회제한
2021타경 56671	1	고흥군 대서면 안남리 신216 27669㎡ [토지·연교·미상분묘소재·분묘기지권설정여지 있음]	임야	350,075,700 350,075,700	일괄매각·목축1도·사건축허가제한·자연보호법준수
2021타경 56985	1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신 14 55835㎡ [공유·지정종말(6/33지분전부·연교·미상분묘소재·분묘기지권설정여지 있음)]	임야	17,258,090 17,258,090	공유자우선매수권 1회제한
2021타경 57070	1	고흥군 대서면 화산리 신3-3 9550㎡ [공유·지분전부·연교·미상분묘소재·분묘기지권설정여지 있음]	임야	10,266,250 10,266,250	공유자우선매수권 1회제한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 특별한 매각조건  
① 농지방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해야 하는 최고·미상분묘소재·분묘기지권설정여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해야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 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상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 공유지의 우선매수권(민사소송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 상의 매각에 있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매각기일 : 2022. 8. 22. (월) 10:00  
④ 매각결정일 : 2022. 9. 5. (월) 16:00  
⑤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08호경매청  
⑥ 입찰방법: 비공개 입찰방식으로 사전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첨부 입찰봉투에 넣어 밀봉하여 투합하여 된다. 매수신청서 첨부으로는 최저매각가의 1회(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발행의 자기인수표 또는 현금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단위:원]	비고
2021타경 57278	1	보성군 회천면 화곡리 484 26399㎡ [현황 토지임야·전·분묘·공유자우선매수 1/2지분전부·제외의수목매각제외·연교·미상분묘소재·분묘기지권설정여지 있음]	임야	16,750,100 16,750,100	공유자우선매수권 1회제한
2021타경 6898	1	구례군 산동면 하관리70-1, 1층 2호 [승원 리조트도미니엄] 406.94㎡	임야	427,000,000 427,000,000	
	2	구례군 산동면 하관리70-1, 1층 3호 [승원 리조트도미니엄] 136.87㎡	임야	144,000,000 144,000,000	
	3	구례군 산동면 하관리70-1, 1층 4호 [승원 리조트도미니엄] 236.75㎡	임야	249,000,000 249,000,000	
2021타경 6720	1	여수시 관문동 968 170㎡ 분할유 [1-1, 관문동968] 125㎡ [1-2, 관문동968-2] 45㎡ 여수시 관문서7길 5 1층40.73㎡ 2층29.95㎡ [제외의 빌딩 61.4㎡]	대 주 택	174,230,800 174,230,800	일괄매각·제외 건물포함

● QR코드:법원 경매정보 웹으로 접속 가능합니다.

● 특별한 매각조건  
① 농지방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해야 하는 최고·미상분묘소재·분묘기지권설정여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해야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 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상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 공유지의 우선매수권(민사소송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 상의 매각에 있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매각기일 : 2022. 8. 22. (월) 10:00  
④ 매각결정일 : 2022. 9. 5. (월) 16:00  
⑤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08호경매청  
⑥ 입찰방법: 비공개 입찰방식으로 사전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첨부 입찰봉투에 넣어 밀봉하여 투합하여 된다. 매수신청서 첨부으로는 최저매각가의 1회(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발행의 자기인수표 또는 현금

를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서작성을 제외한 문서(결정 보증서)를 준비하여 받는다.  
② 1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신청서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된 후 바로 개봉을 실시하여 원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을 최고·미상분묘소재·분묘기지권설정여지 있음의 사항에 있어 입찰의 경우에는 그 입찰보증금의 상환에 추가보증금을 실시한다.  
④ 최고·미상분묘소재·분묘기지권설정여지 있음의 사항은 그 입찰보증금의 상환에 추가보증금을 실시한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원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에 대하여 매각결정일때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결정일때 확정된 대금지급기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매각결정일때 최종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급된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허가를 실시한다. 다만, 매각결정일로부터 지정된 날의 3일경까지 최종 매각허가 결정이 안되면, 배찰을 납부한 대금지급부서 유예한다. 따라서 매각허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허가 결정일로부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분권, 가압류권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분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세와 지분권등기를 납부한 후 등세영수필합인서 및 등세영수필합인서 지분권 등세영수필합인서, 국민주체채권상환보증금 기한 상환을 단행한 방법인 뒤 등기 출제하여야 한다.  
③ 매각대금의 내역은 매각결정일때의 결산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다.  
④ 입찰보증금이 나온 때에는 입찰보증금의 기차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필요로 하는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기 바란다.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보증금 반환을 위임장을 반드시 첨부하고 매각대금 수령을 하여야 한다.  
⑤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사항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등지의 경우에는 최고·미상분묘소재·분묘기지권설정여지 있음의 사항에 대해 매각이 허가된다. 단, 토지이용계획상 등지 등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 상당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다.  
⑥ 고공연막 등 공중매각 시에는 결정사항이 취외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결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된다.  
⑦ 본안에 공표되는 물건은 최종 매각결정일때 확정된 물건이며, 속행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번호 게시판의 공고나 집행의 변경과 매각결정일때의 등기를 참조하기 바란다.  
⑧ 매각대금의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 있다. 이때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한다.  
매각허가 결정 후의 가압류 등 민사소송에서 영향할 수 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센터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할 정보는 법원공고정보 열람에서 열람 가능할 정보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열람 사항(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대법원에게 신청이나 항고, 대법원신청인이 신청상의 열람을 할 수 없으므로, 관할되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판 매각결정의 공고나 비준 매각결정일때서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2. 8. 12.

광주 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오재홍